



여군의 증가 정책에 따른 군대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소고

Essay on Prevention of Military Sexual Offenses according to Policy to
Enforcing Female Soldiers

이 기 선¹⁾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Kisun Lee Military Life Counselor,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초록: 우리나라는 여군(이하 여성군인) 증강정책에 의해 전체 군인들 중에서 여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여군의 증가로 인하여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지만 (예, 군사 문화의 개선), 부정적인 효과들도 드러나고 있다. 부정적인 효과들 중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성차별이나 성범죄 등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군대내 성범죄 사건을 예방하거나 사건의 발생 후 대처하는 방안들은 성군기 사고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이수, 성군기 사고에 대한 즉 처벌제도)이 여러 가지이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여성고충상담관 및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효율적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그 대처 방안을 전개하였다.

주요어: 성군기, 성범죄, 성희롱, 여군

Abstract: There have recently been enlarging the portion of female soldiers according to policy of reinforcing them in the Korean armed forces. Owing to the policy, a number of positive (e.g., betterment in military culture) as well as negative effects could be expected. Higher likelihood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military sexual offenses might be the most frequent example among the negative effects. As though there would be a variety of strategies preventing and/or dealing with the military sexual offenses (e.g., annually compulsory education course on military sex discipline), effective use of both female complaint counselor and military life counselor system was discussed as the best strategy of doing them.

Key words: Female Soldier, Military Sex Discipline, Sex Crime, Sexual Harassment

1) 교신: (우) 562-896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로 사서함 300-14 해군 제3함대사령부 해상전대 이기선 (ksleeco@nate.com).

한국의 여성군인 역사

헌법 제39조1항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에 의거하여 남성은 징병제로 군 입대를 하지만, 여성은 자원에 의해서만 군 복무가 가능하다. 한국의 여성군인(이하 ‘여군’으로 표기함)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첫 여군은 1948년 8월 26일 소위로 입대한 31명의 간호장교였다. 또 공군 창설 이전이었던 1949년 2월 15일에는 육군항공(군)사령부 예하에 ‘여자항공교육대’를 설치했는데, 여기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여학교 5-6학년생(현 고교 2-3학년생)들 중에서 선발시험을 통과한 15명이 여자항공병 이등병 제1기생으로 입대했다. 정부는 1949년 사회적 혼란 수습을 위하여 전국 중등학교 이상에 학도호국단을 설치하면서 여성 체육교사를 중심으로 단기간의 군사훈련을 받도록 한 후 1949년 6월 30일 32명을 소위로 임관시켜 소속 학교에 예비역 장교로 배속시켰다. 배속장교의 훈련대장이었던 김현숙 예비역 중위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여자의용군 모집을 건의하고 모병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를 계기로 1950년 9월 1일 부산에서 자원입대 후 소정의 훈련을 마친 491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여자의용군교육대’가 발족되었다(국방부, 1998, 2008; 김가령, 2013).

여군의 인사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는 1951년 11월 15일에는 육군본부에 ‘여군과’가 설치되었다가 1954년에는 ‘여군부’로 승격되었다. 여군훈련소는 1955년 7월 10일 정식으로 창설되었으며, 여군부는 1959년 1월 1일부터 ‘여군처’로 개편되었다. 그 후 여군 활동의 활성화 목적으로 1970년 12월 독립부대인 ‘여군단’을 창설했으며, 여군 하사관 정예화 계획에 의거하여 여군의 초임계급을 1974년부터 하사로 변경한 이래 오늘에 이르렀다. 또 1990년 2월 1일에 여군훈련소를 해체하면서 ‘여군학교’를 창설했지만, 여군학교도 2002년 10월 31일에 해체되면서 여군정책 통합 필요성에 의하여 곧바로 11월 1일 국방부 직할 ‘여군발전단’이 창설되었다. 그러다가 여군발전단도 2005년 12월 31일에 해체되어 2006년 1월 1일

‘국방여성정책팀’이 신설되었는데, 2008년에는 그 명칭을 ‘국방여성정책과’로 변경했다(국방부, 1998, 2008; 김가령, 2013).

여군의 증강 정책 및 그 영향

증강 정책. 지난 10여 년 동안 여군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부록 1> 참조), 2004년 3,751명으로 전군의 약 2.3% 그리고 2012년 8,354명으로 전군의 4.7%를 차지했으며, 국방부는 2020년까지 그 규모를 11,500명으로 증가시킬 계획을 발표했다(국방부, 2010, 2013a). 여군의 출현 및 증가와 관련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미래사회 국방의 방향이 첨단화되는 군사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예화 및 경량화로 바뀌고 있으며, 그 추세에 따라서 성별보다는 고도의 전문기술을 갖춘 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교육수준과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성별에 상관없이 군 조직에 적합한 인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인구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출산율 저하에 의한 노동공급 감소, 인구 고령화 등의 다양한 이유로 병역대상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서 남성 위주의 병력충원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또 의무복부 차원이 아니라 직업군인으로서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김경순, 2011; 안상수 등, 2012).

이런 맥락에서 국방부(2005)는 ‘국방개혁 2020’을 통해서 여성의 전투병과 진출을 증진하고 여군의 비율을 증가하는 장기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미 1997년에는 공군사관학교, 1998년에는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1999년에는 해군사관학교가 여성의 입학에 허용했으며, 실제로 여성 사관후보생이나 부사관을 모집하고 있다. 국방부의 당초 계획은 2020년까지 여군의 비율을 전체 장교 중 7% 및 전체 부사관 중 5.5%에 맞추어 달성시키는 것이었으나 나중에는 그 목표의 조기 달성 계획으로 수정하였다. 즉 여성 장교는 2013년 4,015명으로 전체 장교 중 6.4%를 차지하는 비율에서 2015년도 4,380명으로 7.0%, 2017년 4,450명으로

7.1% 그리고 여성 부사관은 2013년 5,002명으로 전체 부사관의 3.9%의 비율에서 2015년 5,740명으로 4.5%, 2017년도 6,374명으로 5.0%까지 증강시키는 목표로 수정되었다(국방부, 2013b; 안상수 등, 2012).

여군 증강에 따른 영향. 현재 군대 조직에서 여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범세계적인 추세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여군의 증강은 군대 조직이나 조직의 구성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가? 이를 몇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고찰해본다.

먼저 남성 위주의 군사문화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의 군대 조직에 여성 문화가 침투하면서 폭언이나 구타, 가혹 행위 등의 군기사고가 감소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 등 군부대의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는 효과의 기대이다. 또 남성들이 군복무 의무에 대한 역차별을 덜 느끼게 되면서 자발적인 임무수행을 하는 등의 사기 진작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역시 군인을 매력적인 전문 직업으로 여기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를 평생 직업으로 도전하고 싶은 생각을 갖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김동원, 2007).

다음으로 여군의 도입과 증가는 상황적으로 군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 변화와 맞물리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폭력적인 이미지가 담겨있었던 냉전 이전의 군대 개념이 이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이미지 등도 강조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여군의 도입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전투의 개념도 첨단기술의 무기체계나 정보통신, 운용기술 지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또 우수한 지적 능력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여군의 도입은 당연시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안보의 개념도 지역이나 자원의 안보 차원에서 뛰어넘어 인간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평등이나 존중의 가치 실현 등의 목적으로 여군에 대한 수요가 증진되는 시대적 흐름이 작용하였다(김엘리, 2012).

그러나 우리 군의 시각 속에는 여군을 ‘성군기 사고의 잠재요인’ 또는 군인이기 전에 ‘여성’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안상수 등, 2012). 역시 여군의 도입 및 증가로 강한 남성적인 군대조직의 동질성에 균열이 생기고 전통적 젠더 규범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군 조직이 단순한 성평등이나 군사화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군인 이미지로 변모하고 있지만, 강한 군인으로서의 통치담론은 여군으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하도록 해버리고 있다(김엘리, 2012). 이는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사회보다도 남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이나 성관련 문제가 더 쉽게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미가 된다.

군대내 성범죄

현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운 의원이 2013년 6월 국정감사를 위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대한민국 육해공군이 저지른 범죄는 총 26,866건이었고, 그 중에서 성범죄에 관련된 건수는 1,513건이었다(강기운, 2013). 그 자료에는 성범죄가 네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 중 형법 위반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성범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성범죄는 모두 매년 상승하는 경향이었던 반면, 성매매 관련 성범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성범죄 발생건수는 4년간 비슷했는데, 그 이유는 네 번째 유형인 성매매가 감소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성매매를 제외한 다른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표 1> 참조). 또 그 자료를 공개하면서 강기운 의원은 군대내 성범죄가 은폐되기 쉬운 만큼 드러나 것보다 더 많은 성범죄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물론 <표 1>에 소개한 자료는 남성들 사이에서 발생한 성관련 범죄 및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군인들의 성범죄 등을 모두 포함시킨 것이지만, 여군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건수도 역시 최근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미비할 경우 매년 여군의 증가로 인하

여 범죄 발생도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곧 여군의 증가와 더불어 잦은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는 여군 대상 성범죄인데, 근래 전체 여군의 10.8%에 해당되는 표집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실태조사 및 면접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11.9%의 여군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주변 여군의 성희롱 피해를 인지한 여군은 41.3%에 해당되었다. 후자는 군 당국에 보고된 것보다 실제로 여군이 느끼는 성희롱이나 성군기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안상수 등, 2012).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대표적인 여군 대상 성범죄 사건은 인격모독적인 지나친 질책, 여군 비하, 지속적인 성적 언행, 성추행으로 201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여군 장교(오대위) 사례로 2013년 11월에 공소 제기된 사건이었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던 남성 장교는 오대위 이외에도 다른 여군 6명(대위 1명, 중위 2명, 하사3명)을 추행했던 정황이 드러났지만(한국일보, 2013),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KBS, 2014a). 해당 사건은 비상식적인 양형이라는 점 그리고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뉴스에 이어서 TV프로그램으로까지 다루어졌는데(KBS, 2014b), 이를 계기로 국민들도 군대내 성범죄 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었다. 오대위 자살사건 이외에도

육군사관학교 여생도 성폭행 사건, 여성숙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기무부대 중사 사건(동아일보, 2014), 해군 호위함 함장이 만취 중 여군 2명을 성추행하여 보직 해임되는 사건(조선일보, 2014) 등 군대에서 발생한 성관련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성범죄 예방 대책. 여군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성군기 관련 사건의 발생은 피해자인 여군 개인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군의 조직 만족도나 사기 저하는 물론 대외적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안상수 등,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군 관련 성군기사고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군 구성원 전체의 권익 보호 및 군 조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군대내 성범죄 예방에 관한 효율적인 방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군대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규율은 성 군기사고에 관한 훈령을 통해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성군기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55조에 있으며, 2010년부터는 성 군기사고 원인 분석 등을 담은 제256조를 통해 새롭게 추가했으며, 제258조는 성 군기사고 처리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에 관한 법규는 군형법 제92조에 명시되어 있다 (안상수 등, 2012).

곧 성범죄 예방이나 발생 후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군대내 성범죄는 근절이 아니라 지속 또는 증가하고 있다. 국방부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된 안상수 등(2012)의 여군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및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군대내 성범죄 관련 사항들을 토대로 성범죄 예방에 관한 정책을 꾸준히 발전·추진시켜오고 있다(국방부, 2013b; 대한민국정부, 2014). 예를 들면, 여군 대상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2013년 4월 5일 군형법을 개정했는데(2013년 6월 19일 시행),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고 유사강간죄를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또 국방부 병영정책과는 2013년 7월 10일 ‘성군기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시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성인지 교육,

<표 1> 군대내 성범죄 발생 현황

유형\년도	2009	2010	2011	2012	전체
형법 위반	129	122	135	149	535
성폭법 위반	70	77	97	114	358
아청법 위반	53	67	69	84	273
성매매	134	118	55	40	347
합계 1	386	384	356	387	1,513
합계 2	252	266	301	347	1,166

주. 성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합계 1은 네 유형의 합계임

합계 2는 성매매를 제외한 세 유형의 합계임

성군기사고 예방교육, 사고발생 시 보고체계 강화, 피해자 동의 없는 상태의 신원 공개 금지, 피해자 요구 시 보건상담 및 성폭력 피해의 치료, 보직조정이나 전출 등의 적시적 지휘조치, 성군기 위반자 및 발생부대에 대한 평가 반영 등이다. 그 세부적인 예를 들면,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강화하여 분기 1회 개최하여 매년 1회 이수한 결과를 기록·관리는 물론 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 성군기사고 위반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단 한 차례 위반에도 엄격하게 즉시 징계를 하는 제도(one out 제도)를 시행하는 것 등이다(대한민국정부, 2014).

그러나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 군기사고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때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의 제도들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시행되는지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더 적극적으로 고찰하여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 군은 조직의 특성상 엄격한 상명하복의 기강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 의사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따라 여러 고충처리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운용이 형식적인 경우에 그치는 일이 적지 않다. 남성 중심의 병영문화에서 성희롱과 같은 여군들의 고충 문제가 가장 많이 언론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안상수 등(2012)의 보고에 의하면, 성희롱이나 성 군기위반 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의 질문에 대해서 여군의 절대다수가 개인 수준의 적극적인 대처라고 할 수 있는 ‘거부의사표시’를 했거나 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나중에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지만, 상담관에게 알렸다는 응답(5.9%)이나 군 사법당국에 신고하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응답(0.3%)은 미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들이 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도의 마련보다도 운용, 예를 들면, 성인지 교육이나 전문상담을 누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제도의 효율성이 크게 달라짐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고충상담에 대한 두 가지 제도, 즉 여성고충상담관 제도 및 병

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토대로 성 군기위반 행위의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방안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여성고충상담관 제도

여군의 차별이나 피해 경험을 가장 잘 반영해 주고 있는 사항은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의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의 활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군대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 운영은 국방부훈령(2008)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훈령은 군인복무규율 제25조²⁾에 따라서 여군, 군무원의 고충처리 및 성군기사고의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여성고충상담관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방부, 국방부직할부대, 및 합동참모본부에 여성고충상담관을 두도록 했고, 각 군은 본부 및 사단·여단급 이상 부대에 상담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역시 매년 1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여군에게 성군기사고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여군 등의 고충상담과 성군기사고 예방을 위해 성희롱 발단 초기에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 행위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성군기사고 발생 시 조치를 취하는 여성고충상담관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안상수 등, 2012).

그렇다면, 여성고충상담관 제도는 여군들의 군복무생활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창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군이 실제로 차별이나 인권침해 피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를 묻는 설문조사(안상수 등, 2012)에서 여성고충상담관에게 상담을 하면서 해결하겠다는 응답비율이 32.9%에 불과했으며,

2) 대통령령 제24077호, 공포일 2012.8.31., 시행일 2012.9.1., 타법개정. [군인복무규율 제25조(고충처리) ①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질병 기타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지휘체통에 따라 상담 또는 건의하거나, 군인사법 제5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지어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그냥 참고 견디겠다는 비율이 20.2%나 되었다. 실제로 성희롱 및 성군기 위반 행위별로 여군이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지를 알아볼 때 사안이 중대한 성군기위반 행위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 군 사법당국 신고나 여성고충상담관 및 인권 상담관과의 상담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지 않았고, 오히려 무대응이나 문제제기 없음, 거부의사표시 정도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여성고충상담관 제도와 같은 고충처리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고충문제에 대한 비밀보장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율이 31.3% 그리고 상담관이 군 지휘체통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고충문제 상담이나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는 응답도 35.2%로 높은 편이었다. 곧 고충처리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군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고충처리제도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는지를 질문한 결과, '상담 및 고충처리 내용의 비밀보장'이라는 응답 비율이 46.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상담관 및 고충처리 담당자의 군 지휘체계로부터의 독립적 활동'이 22.0%, '상담관 및 고충처리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8.2%, 그리고 '고충문제 처리를 위한 실질적 권한 부여'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여성고충상담관 제도가 최근까지 비효율적이었음을 암시하는데, 제도의 운용방안에서 변화가 절실하다. 여성고충상담관 업무는 주로 5년 이상 경력의 여군 장교가 자신의 업무와 겸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며, 상담을 하더라도 수당 지급이나 점수 혜택 등의 개인적인 보상도 없는 봉사업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여성고충상담관에 관한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대한민국정부, 2014), 명시된 대상은 여군 및 여 군무원이며, 임무는 고충 상담 업무, 성군기 사고예방, 그리고 성군기 사고 발생 시 조치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고충 상담 업무는 크게 초임 여군, 현역 여군, 임신한 여군을 대상으로 한 인권 및 성군기 위반 사항에 대한 고충 해소이며, 상담관의 역할은 전입 시 보장되는 1:1 면담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고

충상담을 하고 또 드러난 고충의 보고 및 처리, 제도 발전을 위한 제안하는 것이다.

상담관이 고충제기사건을 접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전문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 이 제도의 주요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고충상담관 제도를 현재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훈련을 받은 전담인력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고충처리에 대한 실질적 권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고충 문제를 제기하는 자에 대한 비밀보장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체제기 개편될 필요가 있다(안상수 등, 2012). 안상수 등(2012)의 제안과 지속적인 국정감사에서 군대내 성문제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창구가 여성고충상담관 제도의 이용이라는 지적에 따라서 국방부도 2014년 2월 3일 여성정책·고충상담센터를 개소했으며, 현역 여군이 여성고충상담관을 겸직하면서 운영되는 제도의 한계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을 상담관으로 채용하여 이 제도를 확대·운영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최근 국방부는 군단, 군사급 부대에 14명이 편성되어 총 24명으로 운영될 계획을 보고하기도 했다(대한민국정부, 2014).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란 훈련소에서의 가혹 행위나 일반경계초소에서의 총기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면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병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고 또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상담관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시험적으로 운영할 때 2005년 7월 8명에서 동년 12월까지 육군에 16명 그리고 해군에 4명의 전문상담관을 배치했었는데, 그 결과 지휘관들은 부적응 병사가 감소하는 등 부대관리에 크게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또 이를 기반으로 본 제도를 확대·추진하게 되었다. 전문상담관이 다루는 상담영역이 기본권 이외에 개인의 고충 등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더 친숙한 용어사용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8년 12월 전문상담관

의 명칭을 ‘기본권전문상담관’에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변경하였다(국방부, 2013b; 대한민국정부, 2014).

사병들은 이 제도를 단순히 형식적인 면담을 위한 제도보다도 군 복무 중 겪는 어려운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군 간부들도 본 제도를 통해서 장병들의 기본권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조기에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는 2012년 12월 18일 의원 입법으로 군인사법(제51조의4)에 반영되었으며, 2013년 6월 17일에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관련 군인사법시행령(제60조의17부터 제60조의22까지)이 공포·시행되고 있다. 이에 2013년도에는 199명의 전문상담관이 배치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357명까지 확대·배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병영생활상담전문관의 임무는 상담활동을 통한 장병의 기본권 제한사항 식별 및 시정을 위한 지휘조언,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한 장병을 식별·관리, 사고 우려가 있는 병사나 보호·관심 장병 등에 대한 현장위주 전문 심리상담·관리(개인별 맞춤형 상담치료), 심리검사 시행, 장병·군인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상담, 간부 및 상담병사 대상 상담능력 향상 교육 등이다.

상담관 역할 및 활용에 관한 제언

군대내 성범죄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성희롱이며, 또 성희롱의 배경은 성차별이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차별 의식을 타파시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또 성차별 의식 타파는 단순한 교육보다도 타인과의 교류과정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유와 기회가 자주 주어질 때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상담의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는 것도 그러한 여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병사들의 입장에서 군대생활뿐만 아니라 제대 후에도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방부는 근래 여성고충상담관제도 및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전문상

담관 제도의 활용에 의해서 병사들의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 및 유지를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의 성범죄 예방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상담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는 점이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민간인 상담전문가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성고충상담관은 현역 장교가 그 임무를 겸직하고 있다. 여성고충상담관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전문성이나 겸직 등으로 업무상의 어려움이 많은 현역장교보다도 민간인 전문상담관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물론 그와 같은 변화의 조짐이 최근 나타나고 있지만, 확대되어야 한다(안상수 등, 2012).

둘째, 전문상담관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어야 하는 점이다. 전문 상담관의 경우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대 체계에 대한 이용이 제한되고 정보전달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전문상담관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 및 발전이 있어야 병사들의 건전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은 병사들의 부대 전입 시에 이루어지는 의무적인 상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초기 전입 시는 성희롱을 비롯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는 시기가 아니며, 오히려 적응 및 탐색기간이 지난 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전입 시의 상담에 이은 후속 또는 지속적 상담 등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예방의 효과가 더 확실해진다. 현재는 의무적 상담 이외의 상담 일정은 해당 부대 지휘관과 협의하여 확정되고 있는데, 지속적 상담을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교육의 보강이다. 장병들에게 성군기나 성희롱의 인식, 상황의 발생에 대한 대처 등을 교육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예방 목적으로 조직의 구성원들과 원만하고 적절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인간관계를 조력해주는 업무는 전문상담관이 상담을 통하여

개별적으로도 시도할 수 있지만, 남녀를 불문하고 소집단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자유토론을 실시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성범죄 피해나 가해 방지의 효과는 물론 조직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교육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국방부(2013b)에서는 ‘성군기사고 예방 종합대책’에서 여군 대상 범죄 근절대책의 하나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있으며, 성군기나 성인지 교육은 분기별 1회로 실시되고 있다. 성군기나 성범죄 예방과 같은 교육 목표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이와 같은 목표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는 장병(특히 남성 장병)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인식시켜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군에서는 군 자체의 전투 임무, 자살예방 및 안보교육 등 수많은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의무교육에 해당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인식되었을 경우에는 성차별 타파나 양성평등 의식이 고취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성군기사고 예방이나 성범죄 근절 등의 용어 사용을 보다 더 큰 목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조직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 또는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한 교육이라면 부정적 태도, 수동적 자세, 심리적 저항감과 거리가 더 먼 상태에서 장병들이 교육에 임하므로 교육 목표에 더 쉽게 도달하게 된다.

여섯째, 성 군기사고가 발생했을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사고의 예방이 사후처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만, 사후처리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고와 함께 보직 조정이나 전출 등의 가해자 분리와 같은 실제적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고 후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 등의 처리과정이 더 세심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사고를 신고하고도 후속적인 조치의 미흡 때문에 피해사실을 알린 후에 더 힘들어하는 병사들이 없어야 한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들 중의 하나는 바로 사후 처리가 미흡하여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불이익

(피해자 비난, 사회적 오명 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곧 병사가 피해를 당했을 때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고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이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되는 환경 속에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신고 이후 병사가 피해를 경험하기 시작하여 신고한 이후까지 겪었던 심리적 변화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져 사고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예를 들면, 내담병사의 정서에 대한 공감(empathy)이나 내담병사가 다음 상담까지 버티주기(holding)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곧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가 피해병사를 도와야 하고, 지속적인 상담이 현재보다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기윤 (2013). *대한민국 육해공 군인 4년간 26,866건 범죄 저질러*. (보도자료, 2013년 9월 23일)
- 국방부 (1998). *국군 50년사 화보집*. 서울: 국방부.
- 국방부 (2005). *국방개혁 2020* (2005. 09. 13. 반포). 서울: 국방부
- 국방부 (2008). 특집: 여군 역사 재조명. *국방여성*, 4, 19-25.
- 국방부 (2010). *201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 국방부 (2013a). *2013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 국방부 (2013b). *2013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군사법원 소관)*.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13. 10. 국방부 제출)
- 김가령 (2013). *한국의 여군: 여군리포트*. 서울: 형설출판사.
- 김경순 (2011).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여성: 국방환경의 변화와 여군의 역할 확대. *한국민족연구논집*, 45, 113-201.
- 김동원 (2007). 한국 여군증가의 효과성 분석: 기능적, 문화적, 보상적 효과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3 (3), 169-197.
- 김엘리 (2012). *여군의 출현과 젠더질서의 교란: 여성장교의 군인되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대한민국정부 (2014).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국방부 소관, 2014년 3월).

동아일보 (2014). 여군 속옷 훔치고, 후배 부인과 불륜 의혹도. (2014. 2. 27. 보도)

안상수, 박선영, 김혜영, 최윤정, 김병조, 김동원 (2012).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443-01). 서울: 국가

인원위원회.

조선일보 (2014). 해군 호위함 함장, 여군 2명 성추행. '보직해임'. (2014. 7. 18. 보도)

한국일보 (2013). 자살 女대위 성추행 장교 다른 여군 6명도 추행. (2013. 12. 13. 보도)

KBS (2014a). '오대위 성추행 자살사건' 가해자에 유죄, 집행유예 선고. (2014. 03. 20. 방영 뉴스).

KBS (2014b). 군 성폭력 보고서: 누가 오대위를 죽였나? (2014. 04. 08. 방영 시사기획: 창).

<부록 1> 국방 여성 현황 (단위: 명)

년도	명 (%)	장교							부서관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2004	3751 (2.3)	1	8	45	137	647	1210	6	7	73	737	880
2005	4086 (2.4)	1	9	50	176	982	987	7	8	80	755	1031
2006	4378 (2.6)	1	9	53	175	1145	974	7	9	88	735	1162
2007	4959 (2.7)	1	10	60	218	1230	1110	8	9	96	789	1428
2008	5118 (2.9)	1	9	69	230	1227	1178	9	9	102	842	1442
2009	5841 (3.3)	1	9	74	240	1420	1223	10	10	138	1008	1708
2010	6598 (3.7)	2	12	82	289	1602	1236	13	10	183	1135	2034
2011	7457 (3.9)	3	11	82	305	1788	1307	15	13	231	1282	2420
2012	8354 (4.7)	3	12	89	381	1903	1353	17	16	328	1472	2780
2013	8258 (4.6)	2	11	86	412	1888	1495	17	13	289	1376	2669

주. %는 전체 군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임.